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過而不改)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인간은 잘못하거나 못났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과의 관계가 정해지고, 태어난 고향이 정해진다. 학교에 가면 선배와 후배, 동기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취미 생활의 동호회나 고향 향우들의 향우회에 가도 관계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관계를 만남, 모임, 인연, 운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살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관계를 잘해야 한다.

누구나 수많은 관계 중에서 동창회, 동기회,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등 많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모임에 참가하고나면 누구나 어떤 점은 좋았거나 어떤 점은 미흡했더라든 어떤 소회(所懷)를 갖기 마련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올라온 나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의 모임 등에 참석하고 있다.

여러 모임에서 느꼈던 일을 이 모임에서 보고, 나는 2022년 한국 사회를 표현한 교수들의 사자성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생각났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혔다.

과이불개는 「논어(論語)」의 위령공(衛靈公)편 21장과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등에 나오는데, 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못(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이라고 했다. 잘못이 드러나면 여당은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고 하고,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며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도, 고칠 필요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것 같아 우기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과오를 저지러 수 있다. 공자는 잘못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고치라(과즉무탄개 過則勿憚改)고 가르

치고 있다. 수제자 안회는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不貳過)고 칭찬받았다. 특히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 고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과이불개 이외에도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慾蓋彌彰)(2위·14.7%), '계란을 쌓아놓은 듯이 위태롭다는 누란지위'(累卵之危)(3위·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4위·13.3%), '눈먼 자들이 코끼리 만지듯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한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5위·7.4%)을 선택했다.

과이불개를 선택한 한 50대 인문대 교수는 "자성(自省)과 갱신(更新)이 현명한 사람의 길이고, 자기 정당화로 과오를 덮으려 하는 것이 소인배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크건 작건 간에 모임은 화적이 있든지 없든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예의와 룰이 있다. 왕년(往年)에 똥별 달았다고 설치고, 건달도 못 되면서 골목대장처럼 나대면 그 모임은 온전할 수가 없다. 특히 힘이나 주먹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말로 사는 대명천지 세상에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톨아들이들은 그 모임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낸다'는 그레삼의 법칙은 정치에서나 사회 모임에서도 적용되는 잘못된 경우가 많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인배들은 패거리 짓기를 좋아한다.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나 모임에서 패거리 짓는 데에 관심도 없고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인배들은 패거리를 지어서 남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하면서 설친다. 오만(傲慢)은 추락과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국가에는 나쁜 소인배들을 잡아가두는 형무소가 있다. 공조직이나 회사에도 반드시 감시 부서가 있다. 조그만 친목계에도 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다. 정치에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가 여당이 되더라도 야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감시와 처벌과 응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너진다. 낮과 밤, 올라감과 내려감, 기쁨과 슬픔, 강과 약, 음과 양이 돌고 돌아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 만고(萬古) 불변의 천지 진리다.

칼럼

논 타작물 지원 범위에 지역 특화 품목도 포함해야

기고

정영균 전남도의원



지난해, 최대 농업 이슈는 쌀값 하락이었다.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쌀 생산량은 매년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농가들은 1조 8천억 원의 소득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발생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논에 벼를 대신해 식량작물과 조사료 재배 시, 1ha당 200~500만 원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그간 정부는 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 '쌀생산조정제'와 2011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쌀값이 안정화되면 해당 사업을 바로 종료하는 단순하고 한시적 대응에 그쳐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에는 미흡했다.

실제로도 농업인들은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쌀의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벼농사로 돌아가 쌀 공급과잉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조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식량지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두고 작물의 범위를 두류와 옥수수 등 식량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품목별 재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품목 간 갈등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3년간 시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이 3.75% 감소해, 쌀값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공급과잉 구조인 쌀 관련 정책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만큼 효과적인 방안도 사실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렇다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아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값 정상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쌀값 안정과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간 추진해온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쌀값 폭락에 따른 한시적 대책에 한정하기보다 지원 범위를 적극 확대해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식량작물과 조사료에 한정된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확대와 특정 품목 업자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재배면적 지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별도의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통한 판로 확보와 해당 품목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품목별 지도·교육 등 새로운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불만 해소와 품목 전환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범위에 지역 특화 품목이 포함된다면, 농가에 특화 품목 재배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에 특화 품목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통한 쌀 수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라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가 항구적인 농정 대응을 견지해 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를 고대한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

김효정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대수가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가 1000만 대에 육박한다.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전기차 판매량은 15만 1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내연기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의 대표적인 화



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으며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방대원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룸을 열어 화재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소화를 하기 위해선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장시간 배터리를 냉각시키면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냉각수조를 이용해 배터리의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만들어 연쇄반응 폭주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소비된다. 전기차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평소 전기차의 과충전을 주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충격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한 진압 활동은 자제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히 119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119 신고 시에 전기차량인지를 알려주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전기 자동차 화재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기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